

보도설명자료 (17.10.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...전기요금 최소 20% 오른다”(10.12, 연합뉴스·조선비즈 등)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간 230조원 이상에 이르며,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, 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%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
-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기사에 인용된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,
 -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.5GW로, 7차 계획의 113.2GW 대비 12.7GW가 감소할 예정임
 -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
- 또한,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이고,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'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%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,
 -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함

※ 주요 국내외 전문기관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(LCOE) 전망

구 분	IRENA	Bloomberg	에너지경제연구원	현대경제연구원
대상	전세계 가중평균	우리나라	우리나라	우리나라
시점	'15년 ⇨ '25년	'17년 ⇨ '30년	'16년 ⇨ '24년	'16년 ⇨ '30년
하락률	59% ↓	66% ↓	36% ↓	31% ↓

- 따라서, 2035년까지 누적 전력생산비용이 230조원 이상이고, 전기요금이 2024년부터 20%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음
-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은 입력 전제에 따라 결과값에 큰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 전제가 매우 중요함
- 예를 들어,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는 7차 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, 2029년 발전비용이 11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으나,
-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, 8차 계획의 전력수요 잠정안을 근거로 2030년 발전비용이 6.6조원 증가한다고 산출하였음
- 이처럼 전기요금 영향은 입력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(044-203-5260)
이보라 사무관(044-203-5261)